

KREI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플러스



심재현 | 연구위원
jhsim@krei.re.kr

김상호 | 연구위원
skim@krei.re.kr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인구 추세 변화와 의의

KEY MESSAGE

-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인구 증가 및 유지 추세 확인, 인구 유입의 관건은 지급액이 아니라 지급 방식

SUMMARY

- 시범지역 인구 반전: 기본소득 시범지역 10개 군만 6개월 동안 인구가 4.93% 증가함.
- 금액보다 지급 구조: 기존 주민에게만 한정된 현금 지원은 효과가 없었으며, 인구 증감을 가른 것은 신규 전입자에게도 수급 자격을 여는 방식이었음.
- 일회성 vs 지속성: 일회성 지원은 지급 후 전출이 급증했으나, 시범지역은 오히려 전출이 감소해 안정적으로 인구를 유지함.

01 시범지역의 인구는 늘었나?



시범지역 10개 군에서 인구 감소 추세가 멈추고 증가로 전환

| 지금 6개월 동안 10개 군 전부 증가, 비교 집단은 정체 또는 감소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총 10개 군(2025년 10월 7개 군, 12월 추가 3개 군)에서 시행 중임.
- 전 주민에게 월 15만 원(신안·영양 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모바일형)으로 2년간 지급하며, 2026년 1월분(소급)부터 6월분까지 지급돼 정책 효과를 중간 점검할 시점임.
- 선정 직전인 2025년 9월을 기준으로 2026년 6월까지 시범지역 10개 군의 주민등록인구는 318,841명에서 334,547명으로 4.93% 증가함. 반면 같은 기간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비교 집단 인구는 정체 또는 감소를 지속함.

〈표 1〉 집단별 주민등록인구 변화(2025. 9. → 2026. 6.)

단위: 개, %

집단	군 지역 수	인구 변화	비고
시범지역(선정)	10	+4.93	최초 선정 7개 군 +5.23% 증가 추가 선정 3개 군 +4.20% 증가
신청-미선정	33	-0.33	공모에 신청했으나 미선정
미신청	19	-0.78	공모에 신청하지 않음

주: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군(郡) 지역 69개를 공모 참여 여부 기준에 따라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음. 통제변수·고정효과를 두지 않은 원계수 기술통계이며 인과 추정이 아님.

자료: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주민등록 인구통계(시군구·월별), 검색일: 2026. 7. 17.

- 시범 사업 대상지의 인구 유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비교 집단을 구성함.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공모에 신청(경쟁률 약 7:1)했고 그중 10개 군이 선정됨.¹⁾
- 또한 시범사업 미신청 19개 군의 인구 감소율이 가장 커(-0.78%), 정책 의지와 인구 추이가 연관됨을 시사함.

1) 다만 2026년 2차 공모에서 7개 군(보은·보성·구례·무주·진안·청송·화천)이 2026년 6월 11일 추가 선정되었고, 관측 종점인 2026년 6월 한 달 동안 이들 7개 군에서만 인구가 합계 3,065명 급증함(같은 기간 여타 비교 대상 52개 군은 합계 1,504명 감소). 발표 직후 유입이 관찰 기간에 포함되어 이들은 더 이상 미처치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 고의 모든 집단에서 제외함. 그 결과 신청-미선정은 33개 군, 미신청은 19개 군임. 신청-미선정 33개 군은 시범지역과 동등한 정책 의지를 가졌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집단이므로, 이 둘의 대조는 단순 전후 비교나 전국 평균과의 비교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비교집단으로 설정함.

02 같은 현금 지원, 왜 달랐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들도 현금성 지급을 추진

같은 '전 주민 현금성 지원'이라도 수급 자격 요건이 인구 반응을 가름

- 2025년 10월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발표 이후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인구감소지역 군 지자체에서 현금성 지급이 확산되어, 시범지역의 인구 증가를 기본소득만의 효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됨. 이에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자체 현금성 지원을 전수조사함(정책 명·지급액·정책 공고일·수급 기준일·지급 시기).²⁾
- 조사 결과, 시범지역 10개 군을 제외한 52개 군 중 17개 군이 조사 기간 내에 전 주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함. 그러나 인구 반응은 지급 여부가 아니라 수급 자격 요건에 따라 달랐음.

〈표 2〉 지원 유형별 인구 변화(2025. 9. → 2026. 6.)

단위: 개, %

유형	군 수	인구 변화	지급 구조
농어촌기본소득	10	4.93	월 15만 원(2개 군:신안, 영양 20만 원), 2년간(26. 1.~27. 12.) 계속 지급 + 실거주 확인
자체 현금: 신규 유입 포함형	2	2.46	일회성. 수급 기준일이 공고일보다 늦어 공고 후 전입해도 수급
자체 현금: 기존 주민 한정형	15	-0.54	일회성. 수급 기준일이 공고일 이전이어서 신규 전입자 제외
미지원	30	-0.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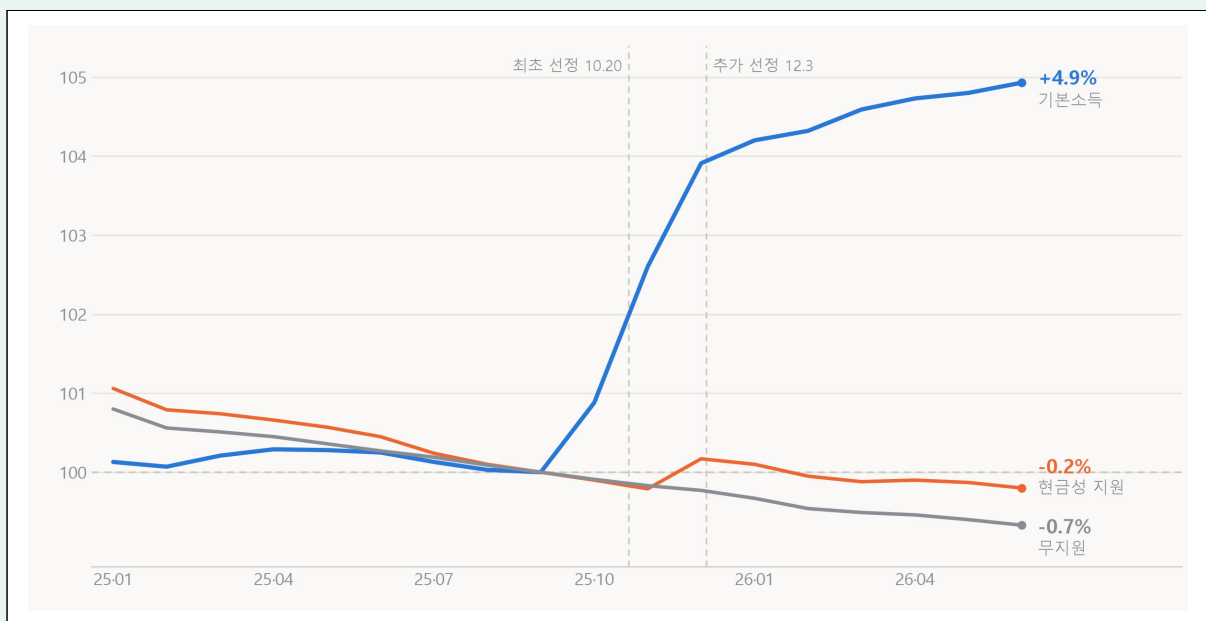
주: 조사 기간은 2025년 하반기~2026년 상반기임. 특정 계층 대상 선별 지원, 광역(도) 단위 정책, 조사 기간 밖(2025년 상반기) 지급 5개 군은 제외함. 군별 상세는 〈부록〉 참조.

자료: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주민등록 인구통계(시군구·월별), 검색일: 2026. 7. 17.; 69개 군청 공고·조례·지역언론 원문 전수조사(2026. 7.).

2) 각 군에 대해 군청 공고·조례·지역 언론 원문을 확인하여 조사 기간 내 전 주민(또는 전 세대)에게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 현금성 정책을 식별함. 제외 기준과 군별 상세는 〈표 2〉 주 내용 및 〈부록〉 참조.

- 반응 시점도 발표 일정과 정확히 맞물림. 각 집단은 지역 선정 발표 시점에만 반응함. 추가 선정 3개 군 인구 이동 규모는 최초 발표가 있었던 2025년 10~11월에는 움직이지 않다가(월 전입 평시 508명 → (10월) 439명·(11월) 550명) 자체 발표가 있었던 12월에만 2,647명으로 5.2배 증가함(20세 이상 기준).³⁾

〈그림 1〉 세 집단의 월별 인구지수 추이(2025. 9. = 100)



주 1) 시범지역 10개 군, 자체 현금성 지원 17개 군, 무지원 30개 군임.

2) 시범지역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평탄 또는 하락함. 자체 현금성 지원 17개 군은 그림에서 하나로 합친 것이며(-0.20%), 수급 자격 요건에 따라 신규 포함형 2개 군(+2.46%)과 기존 한정형 15개 군(-0.54%)으로 갈리는 양상은 <표 2>에 별도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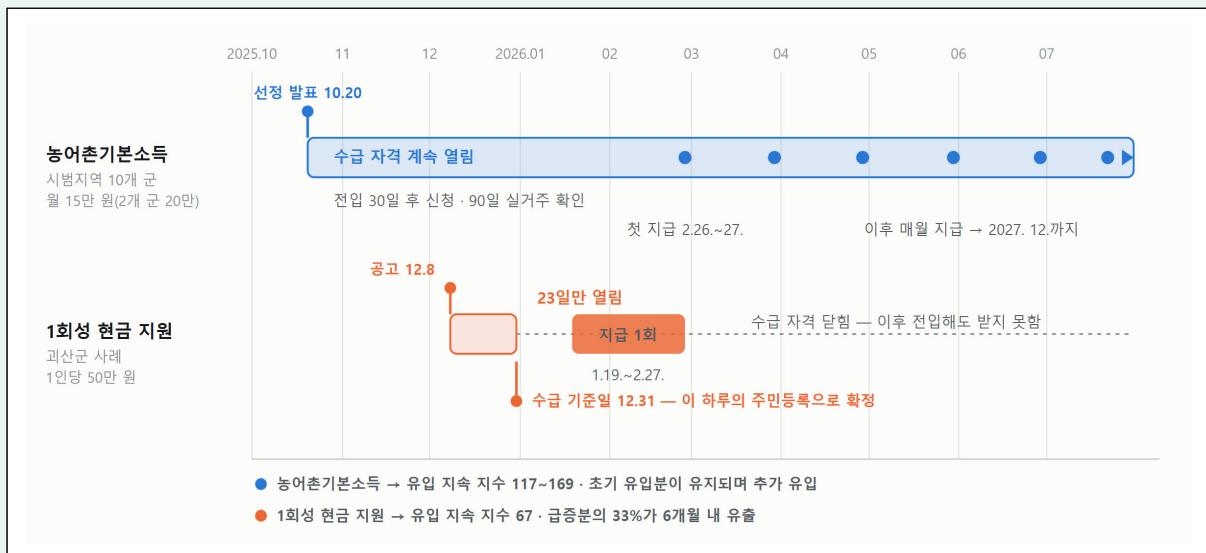
3) 세로 점선은 선정 발표 시점(최초 선정 2025. 10. 20., 추가 선정 2025. 12. 3.)임.

자료: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주민등록 인구통계(시군구·월별), 검색일: 2026. 7. 17.; 69개 군 자체 현금성 지원 전수 웹 조사(2026. 7.).

I 지급액이 아니라 수급 자격을 여는 설계가 전입을 만듦

- 지급액의 크기는 인구를 유입하는 데 결정적이지 않았음. 단양(20만 원)·울진(30만 원)·구례(60만 원) 등은 기존 주민 한정형이어서 인구 유입 측면에서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은 군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보임.
- 반대로 신규 전입자에게도 수급 자격을 여는 방식을 채택한 지역에서 인구 유입이 발생하였음. 농어촌기본소득은 선정 발표 후 전입한 주민도 전입 30일 후 신청하여 90일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으므로 이 유형에 해당하며, 월 단위로 2년간 계속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회성 지원과 구별됨.⁴⁾
- 다만 기준일 날짜만으로 판정할 수는 없음. 고창군은 수급 기준일(2025. 9. 15.)이 공고일(8. 5.)보다 늦어 형식상 신규 포함형이나, 계속거주 요건 탓에 실제 전입 마감일이 8월 16일로 당겨져 유인이 작동할 기간이 11일에 그쳤고 인구도 -1.04%였음(〈부록〉 주 1) 참조). 계속거주 요건을 포함한 자격 요건 전체가 유입 유인을 결정함.⁵⁾

〈그림 2〉 지급 구조 비교: 수급 자격이 열려 있는 기간



주: 농어촌기본소득은 선정 발표 이후 자격이 계속 열려 있고(약 26개월) 매월 지급되는 반면, 일회성 지원(괴산군)은 정책 공고일부터 수급 기준일까지 23일만 열렸다가 닫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6),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 괴산군청 민생안정지원금 공고(2025. 12. 8.).

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 2. 10.), “‘농어촌 기본소득’ 2월 말 첫 지급…10개 군 주민에 월 15만 원”.

5) 고창군 보도자료(2025. 8. 5.), “군민활력지원금 지급결정(1인 20만원)” 및 관련 보도자료(뉴스1, 2025. 8. 5., “‘1인당 20만원 받는다’…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 지급결정”; 중도일보, 2025. 8. 6., “‘고창군, 추석 전 군민활력지원금 1인 20만원 지급’) 참고.

03 늘어난 인구는 남는가, 어디서 왔나?



일회성 지원은 빠져나가고, 기본소득은 남음

- 일회성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 괴산군⁶⁾은 수급 기준일(2025. 12. 31.)을 앞두고 12월 전입이 평시 월 225명의 12.8배인 2,878명으로 급증함.⁷⁾ 하지만 12월 인구 유입 급증 이후 전출 또한 증가했다는 사실이 이동 자료에서 직접 확인됨. 괴산군의 시군구 간 전출은 2025년 12월~2026년 5월 월평균 328명으로, 직전 3년 같은 6개 달 평균(257명)의 1.27배임. 같은 기간 전국 전출은 1.03배에 그쳤으므로 계절 요인을 제외한 초과 증가는 1.24배임. 그 결과 주민등록인구는 정점(2025. 12. 38,293명) 대비 2026년 6월까지 878명 감소해 초기 급증분의 67%만 남음.
- 반대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은 전출이 오히려 줄었음. 같은 기간 선정 10개 군의 전출은 직전 3년 같은 달 평균의 0.85배(계절 보정 0.83배)로 감소했고, 10개 군 중 9개가 감소함(옥천 0.71~순창 1.02). 동일하게 공모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33개 군(0.97배)과 비교해도 전출이 12% 적음. 매월 수급이 이어지고 실거주가 확인되는 구조가 잔류 유인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일회성 현금(괴산 1.27배)과 방향이 정반대임.
- 괴산군의 경우 유출의 행선지는 인구가 유입한 출발점과 겹침. 같은 6개월간 인접권(증평·청주 4개 구·충주·음성)에서 괴산으로 2,137명이 들어오고 같은 권역으로 990명(46%)이 나감(음성 63.8%, 충주 53.7%, 증평 51.8%, 청주 4개 구 38~52%).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흐름이 관측됨.⁸⁾
- 초기 유입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기 위해 유입 지속 지수(Migration Persistence Index)를 사용함. 발표 직후 급증분을 100으로 두고, 관측 시점(2026년 6월)의 순증분을 지수화한 값임. '유입 지속 지수 = (관측 시점의 순증분 ÷ 초기 급증분) × 100'이며, 100 미만이면 초기 유입의 일부가 이탈했음을, 100 초과면 초기 유입이 유지되면서 추가 유입이 이어졌음을 뜻함.

6) 괴산군을 일회성 지원의 대표 사례로 든 이유는 ① 수급 기준일을 공고일보다 늦춰 신규 전입자에게도 수급 자격을 얻 '신규 포함형'이라 농어촌기본소득과 유입 유인 구조가 같고, ② 정책 공고(2025. 12. 8.)가 기본소득 추가 선정 발표(2025. 12. 3.)와 시기가 겹쳐 계절 요인을 공유하기에 선정함.

7) 충청일보(2026. 6. 23.), "괴산군 인구 '반등' 홍보 녀 달 만에 무색...5개월 새 820명 감소".

8) 전출 실측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입신고 원자료(전국 시군구 간 이동, 2025. 10. 1.~2026. 6. 30., 누적 3개 구간)를 차분해 얻은 2025. 12.~2026. 5. 구간이며, 평시 기준선은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MDIS)의 직전 3년(2023~2025년)과 같은 6개 달(12~5월) 월평균임. 10~11월은 12~5월보다 전출이 약 20% 낮은 비수기여서 이를 기준으로 쓰면 배율이 과대 산출됨. 관내(읍·면·간) 이동은 양쪽 모두 제외함. 지역 단위 흐름이므로 12월 전입자 본인이 되돌아갔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할 수 없음.

〈표 3〉 초기 급증분의 유입 지속 지수

단위: 명, 지수(초기 급증분 = 100)

집단	유인 구조	초기 급증분	2026. 6. 순증분	지속 지수
괴산군	50만 원 1회, 수급 기준일 하루	2,675	1,797	67
시범지역 최초 선정 7군	월 15만~20만 원, 2년	10,012	11,698	117
시범지역 추가 선정 3군	월 15만 원, 2년	2,281	3,844	169

주 1) 기준 월: 초기 급증분·순증분은 각 집단의 선정 발표(괴산군은 정책 공고)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함(최초 선정: 2025. 9., 추가 선정 및 괴산군: 2025. 11.).

2) 수치 불일치: 최초·추가 선정의 순증분 합(+15,542명)과 10개 군 총 증가(+15,706명, 2025. 9. 기준)의 차이(164명)는 추가 선정 3개 군의 선정 이전(2025. 9.~11.) 변동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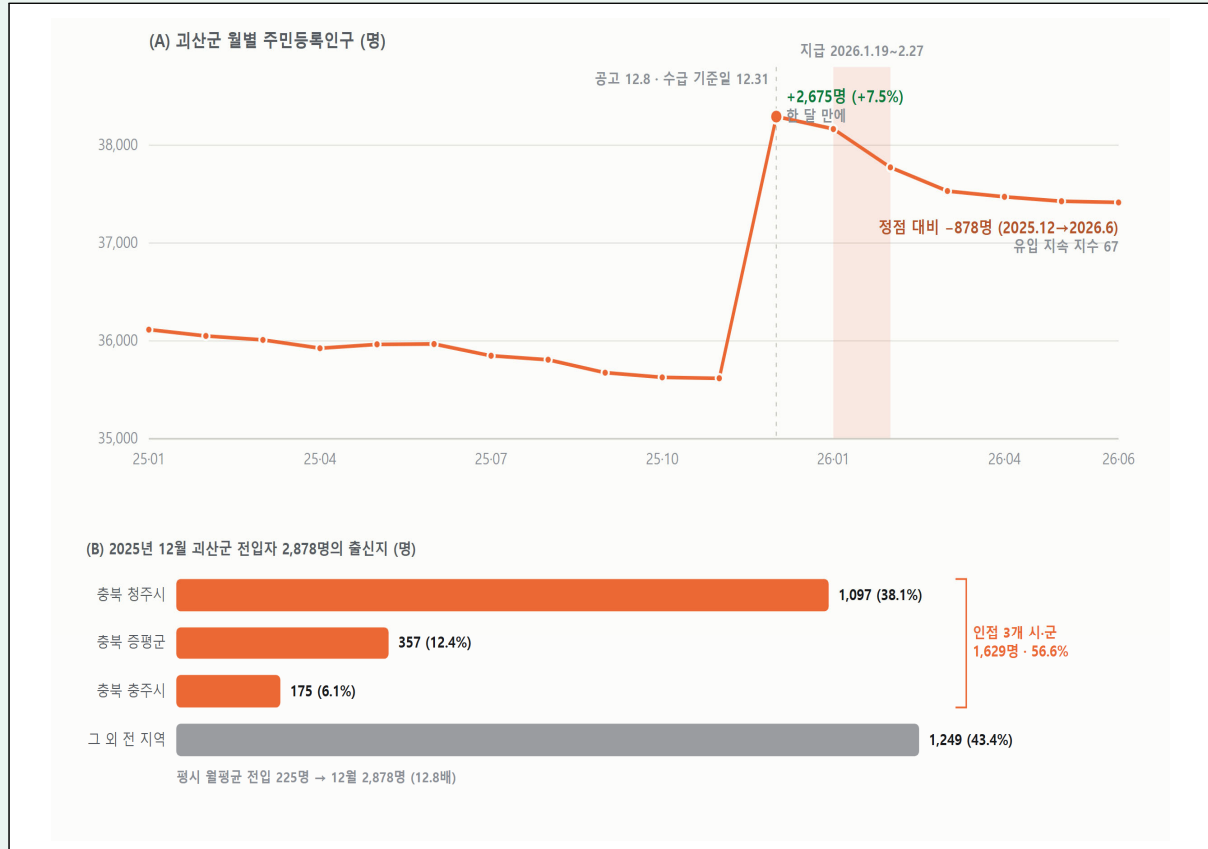
3) 지수 해석: 100 초과는 초기 유입 유지 및 추가 유입 지속을 뜻함. 본 지수는 개인 추적이 아닌 주민등록 잔량(순인구) 기준이므로 개인의 잔류 여부가 아닌 '지역 인구 유지력'을 나타냄.

4) 괴산군 지수: 평시 계절 감소분 차감 시 81(직전 2년 같은 기간 감소율 -0.97% 적용), 동시기 통제군(신청-미선정 33개 군, -0.34%) 기준 시 72로, 기준선 선택에 따라 67~81 범위임.

자료: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주민등록 인구통계(시군구·월별), 검색일: 2026. 7. 17.

- 초기 급증분은 각 집단의 선정 발표(괴산군은 정책 공고) 직전 월부터, 급증이 공통으로 마감된 2025년 12월까지의 증가분으로 고정함(최초 선정 2025. 9. → 12., 추가 선정·괴산 2025. 11. → 12.). 구간을 집단마다 재량으로 조정하지 않음. 순증분도 같은 기준월 대비 2026년 6월 값임.
- 시범지역의 지수가 100을 넘는 것은 초기 유입분이 유지되면서 추가 유입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함. 이는 앞서 확인한 전출 감소(0.83배)와 같은 맥락임. 남아있어야 지원금 수급이 유지되는 구조가 잔류 유인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 다만 정착의 최종 판정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이후에만 가능하며, 괴산군 사례는 지급이 끝난 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앞당겨 보여주는 축소판으로 읽어야 함. 이 판단이 괴산군 한 사례에만 기대는 것은 아님. 같은 50만 원 일회성 신규 포함형인 영동군도 지속 지수가 68로 괴산군(67)과 사실상 같아, 유입 규모(+4.88%대 +0.45%)가 달라도 남는 비율은 지급 구조가 같으면 수렴함. 시범지역의 117·169와는 뚜렷이 갈림〈부록 참조〉.

〈그림 3〉 괴산군 인구 꺾적과 12월 전입자 출신지 분해



주 1) (A) 2025. 1.~2026. 6. 월별 주민등록인구: 2025. 12. +2,675명 급증 후 2026. 6.까지 -878명임.

2) (B) 2025. 12. 전입 2,878명(전 연령)의 출신지는 청주 1,097명(38.1%)·증평 357명(12.4%)·충주 175명(6.1%)임.

자료: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주민등록 인구통계(시군구·월별), 검색일: 2026. 7. 17.;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MDIS)(<https://mdis.mods.go.kr/>), 국내인구이동통계, 검색일: 2026. 7.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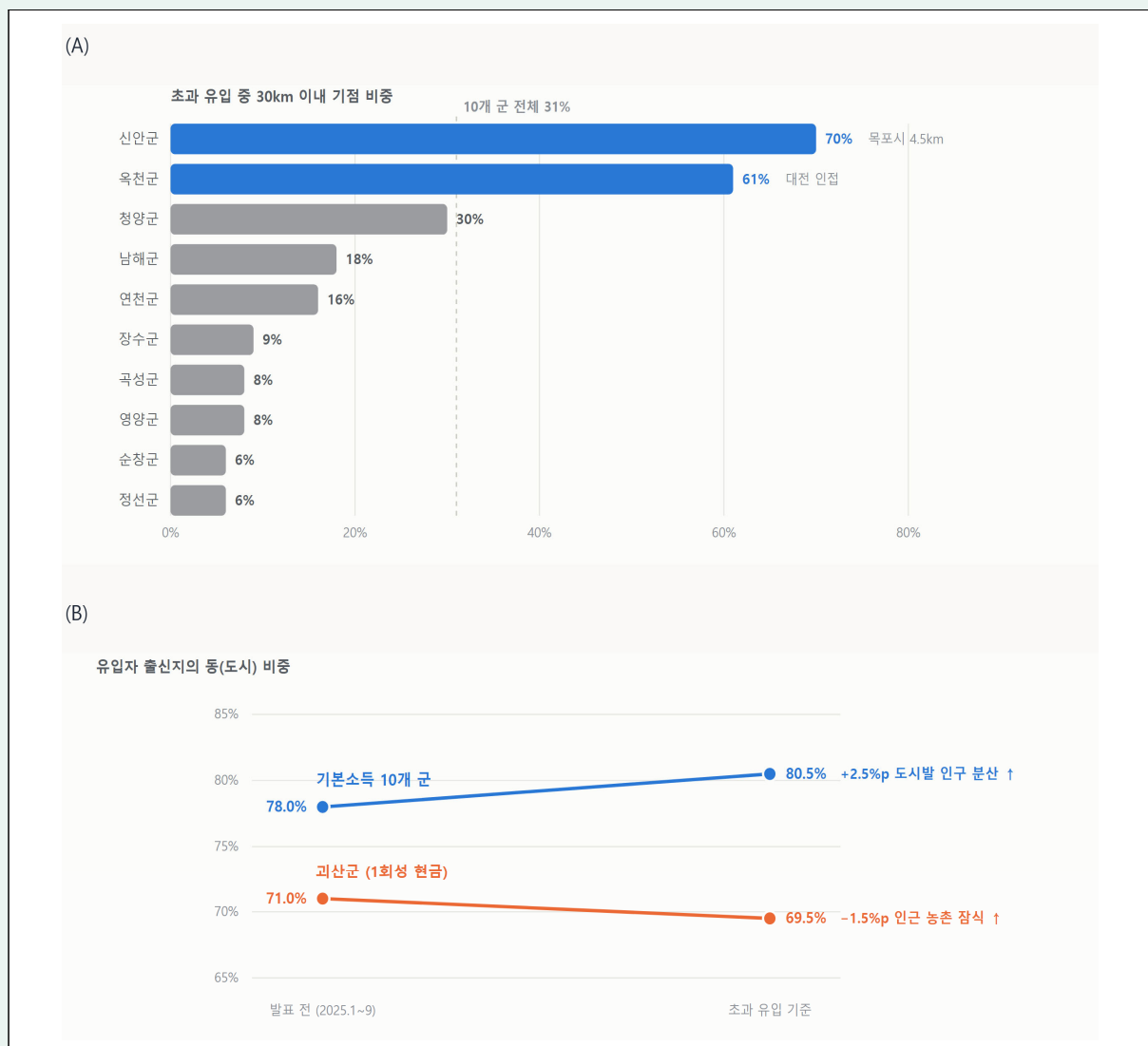
I 유입의 성격: 인근 지역의 잠식인가, 도시로부터의 분산인가?

- 국회는 시범사업이 농어촌 혁신을 저해하고 “주변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⁹⁾ 전입자의 출신지를 분석한 결과, 일회성 지원과 기본소득은 유입의 성격이 상반됨.
- 괴산군 12월 전입자의 출신지는 인접 3개 시·군이 56.6%를 차지했고, 같은 달 이들 3개 시·군의 주민등록인구 변화는 합계 -2,240명(청주 -1,499명·증평 -422명·충주 -319명)이었음. 괴산의 증가(+2,675명)와 규모가 맞물려 인근 지역 간 재배치 성격이 확인됨.

9) 국회(2025),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의 지적 사항: “사업효과 및 재정 부담 종합 고려 필요”,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 검증이 이뤄질 필요”, 부작용으로 “농어촌 혁신 저해, 주변 지역 인구 흡수” 제시(문화일보, 2025. 11. 7., ““농어촌기본소득 전국 확대 땐 5兆 소요””).

- 반면 초과 유입의 도시(동) 지역 출신 비중을 보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은 평시 78.0%에서 80.5%로 상승(+2.5%p)한 데 비해 괴산군은 71.0%에서 69.5%로 하락(-1.5%p)함. 방향이 반대이며, 기본소득의 유입은 도시로부터의 인구 분산에 가깝고 일회성 지원은 인근 농촌 잠식에 가까움.

〈그림 4〉 인접지역 의존도(A)와 평시 대비 도시 출신 비중 변화(B)



주 1) (A) 군별 초과 유입 중 30km 이내 기점 비중임.

2) (B) 각 지역의 평시(2025. 1~9.) 유입 구성 대비 초과 유입(급증 구간 실제 유입 - 평시 기준선)의 동(洞) 출신 비중 변화임.

3) 30km 이내 이웃의 구성은 지역마다 달라(옥천-대전, 신안-목포 vs 괴산-음성-증평) 인접 의존도의 수준 비교는 제한적 이므로, (B)와 같이 각 지역의 평시 대비 변화로 읽어야 지리적 교란이 상쇄됨.

자료: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주민등록 인구통계(시군구·월별), 검색일: 2026. 7. 17.;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MDIS)(<https://mdis.mods.go.kr/>), 국내인구이동통계, 검색일: 2026. 7. 15.

- 인접 잠식 우려는 군별로 갈림. 신안(70%)·옥천(61%) 2개 군에서는 인접 의존이 실제로 높아 국회가 지적한 인근 흡수 우려가 유효한 반면, 나머지 8개 군은 6~30%에 그침. 초과 유입 중 30km 이내 인접 기점 비중은 10개 군 합산 31%이고 100km 초과 원거리도 28%임. 두 군은 각각 목포시가 4.5km, 대전 자치구가 10~20km 거리에 있다는 지리적 조건이 작용하므로, 시범사업 확대 시 대도시 인접 지역에서는 기점 구성의 관찰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Ⅰ 한계: 인구 유입 효과는 발표 시점에 집중되었음

- 유입을 이끈 것은 현금 수령이 아니라 수급권 확정 신호였음. 총 증가의 86%(최초 선정)·82%(추가 선정)가 선정 발표 월을 포함한 3개월 내 발생했고, 실제 첫 지급이 이루어진 2026년 2월의 인구 증분은 최초 선정 7개 군 기준 +0.07%p로 관측 전 구간에서 가장 작았음.
- 다만 발표 직후에 유입이 집중된 현상이 곧 수급 목적의 위장전입을 뜻하지는 않음(등록만 하고 떠나는 이동이 지배적이라면 이후 전출 배율이 높아져야 하나, 앞서 본 대로 시범지역은 전출이 줄고(0.85배) 지속 지수도 100을 넘어 괴산군(1.27배·지수 67)과 반대 패턴임).
- 제도적으로도 주민등록만으로는 수급이 유지되지 않음.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거주 요건과 90일 실거주 확인을 거쳐야 하고, 이후에도 매월 지급이 실거주 확인과 결부됨. 지방선거(2026. 6.) 목적의 전입 가설도 시점이 맞지 않음. 유입은 선거 7개월여 전인 선정 발표 직후에 집중되었고, 선거는 비교 집단에도 공통이므로 집단 간 격차를 설명하지 못함. 다만 개인 추적 자료가 없어 위장전입의 규모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후속 연구의 검증 대상임.
- 이는 상설화·증액 논의¹⁰⁾에서 전제되는 ‘지속적 유입’과 성격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함.
- 연령 구성에도 과제가 남음. 월평균 전입자 수를 처치 전후로 견주면 65세 이상의 증가율이 가장 크고(+340~638%) 30대가 가장 낮음(+189~372%). 20대와 30대의 구성비는 오히려 하락(20~29세 -3.4~4.9%p, 30~39세 -3.1~3.4%p)하여 정착·출산 연령층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부진함. 주거·보육·일자리 등 정주 여건의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관측 기간이 6개월분 지급 시점에 한정되며, 시범사업 종료(2027년) 이후의 정착 여부는 현재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음. 신안군은 별도의 지역 자원 배당(햇빛·바람연금, 군민 49% 대상)이 중첩되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10) 최근 상설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음. 이재명 대통령은 시범사업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을 공개 제안하며 재원으로 농어촌특별세 활용을 시사했고(경향신문, 2026. 6. 10.,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을” 이 대통령, 농특세 활용 제안”), 농식품부는 연내 관련 법 제정 방침을 밝혔음(머니투데이, 2026. 6. 1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개 군으로 확대…李 “영구 도입” 상설화 관심”).

04 시범사업 초기 인구 유입의 의의와 시사점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는 지역 및 공동체의 활력 제고

- I 인구 유입은 단선적인 초기 성과에 불과함. 궁극적으로는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내생적 발전과 활력 증진을 지향해야 함.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에서 인구 감소 추세의 반전이 관측되며, 이는 동일한 정책 의지를 가진 신청-미선정 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범사업과 결부된 변화로 판단됨. 지급 구조가 다른 지자체 현금성 지원과 비교할 때 효과의 크기와 지속성 모두에서 구별됨.
 - 정책 설계 측면의 함의는 세 가지임. 첫째, 비교된 사례들에서 인구 반응을 가른 것은 지급액이 아니라 수급 자격 요건의 설계였음. 신규 전입 유인을 의도한다면 수급 기준일을 공고 이후에 두어야 하고, 계속거주 요건까지 함께 보아야 함. 둘째, 일회성 지급은 등록인구를 단기간 늘릴 뿐 관측 기간 내 순인구 유지로 이어지지 않았음. 셋째, 근접 군 간 경쟁적 일회성 현금은 순증 없는 재배치를 부를 수 있어 기준일·지급 시기의 조율이 요구됨. 성과 평가 설계에도 함의가 있음. 인구 증가율 단독이 아니라 유입 지속 지수와 시간 경로를 함께 보는 지표 구성이 필요하며, 유입이 세 차례의 선정 발표 시점에 집중된 만큼 발표에 따른 일시적 쏠림인지 지속적 유입인지는 지급 기간이 더 경과한 뒤 재검증되어야 함.
 - 앞서 언급했듯 이 사업의 시행지침상 명시된 목적은 주민의 소득안정과 지역 활성화의 선순환이며, 인구 유입은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가장 가시적으로 확인된 하나의 축임.
 - 따라서 본 고의 결과는 시범사업 성과의 일부에 대한 중간 점검으로 읽혀야 함. 소득안정 효과, 지역 상권과 공동체 활력에 미친 영향 등 나머지 축에 대해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다층적·다면적 연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축적될 때 시범사업의 전체 성과와 상설화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할 것임.

부록 자체 현금성 지원 21개 군 상세

가. 신규 유입 포함형(수급 기준일 > 정책 공고일): 3개 군, 평균 +2.46% 증가(★ 제외)

단위: 만 원, %

시도·군	지급액	정책 공고일	수급 기준일	인구 변화	유입 지속 지수
충북 괴산	50	2025. 12. 8.	2025. 12. 31.	4.88	67
충북 보은★	60	2025. 12. 10.	2025. 12. 31.	2.88	-
충북 영동	50	2025. 12. 12.	2026. 1. 1.	0.45	68

나. 기존 주민 한정형(수급 기준일 ≤ 정책 공고일): 18개 군, 평균 -0.54% 감소(★ 제외)

단위: 만 원, %

시도·군	지급액	정책 공고일	수급 기준일	인구 변화	유입 지속 지수
전남 보성★	30	2026. 1. 27.	2025. 12. 16.	2.39	-
전북 무주★	80	2026. 2. 20.	2026. 2. 2.	2.26	-
전남 구례★	60	2026. 1. 20.	2025. 12. 31.	2.08	-
대구 군위	54	2025. 12. 30.	2025. 11. 30.	1.22	-
경북 울진	30	2026. 2. 5.	2025. 12. 31.	0.59	-
전북 임실	20	2025. 12. 24.	2025. 11. 30.	0.18	-
경북 의성 ^{주2)}	30	2025. 12. 23.	2025. 11. 30.	-0.10	-
전남 강진	20	2025. 11. 10.	2025. 10. 31.	-0.20	-
충남 금산	30	2026. 4. 3.	2026. 3. 20.	-0.32	-
전남 영암	20	2026. 2. 3.	2026. 1. 29.	-0.37	-
전남 장흥	20	2025. 8. 28.	2025. 6. 18.	-0.75	-
전남 화순	10	2025. 9. 3.	2025. 7. 31.	-0.79	-
경남 산청	20	2026. 3. 20.	2025. 12. 31.	-0.85	-
경남 고성	30	2026. 4. 2.	2026. 4. 1.	-0.92	-
전북 고창 ^{주1)}	20	2025. 8. 5.	2025. 9. 15.	-1.04	-
전북 부안	30	2025. 8. 19.	2025. 8. 12.	-1.04	-
충북 단양	20	2026. 1. 5.	2025. 12. 31.	-1.17	-
충남 서천	5	2026. 6. 10.	2026. 5. 20.	-1.44	-

주 1) 고창군: '명목상 개방, 실질 차단'의 사례임. 수급 기준일(9. 15.)이 공고일(8. 5.)보다 늦어 날짜만 보면 신규 포함형이나, "8월 16일~9월 15일 최소 1개월 이상 주민등록 유지" 요건 때문에 실제 전입 마감일 8월 16일로 당겨져 유인이 작동할 '창이 11일에 그쳤음. 인구도 -1.04%로 무반응이어서 기존 한정형으로 분류.

2) 경북 의성은 2건(재난기본소득 2025. 12., 민생지원금 2026. 5.)을 시행했으며, 표에는 조사 기간 내 첫 정책만 표기함. 지급 사유는 민생안정(물가·소비 진작) 14개 군, 농촌수당·활력 3개 군, 공모 탈락 후 자체 기본소득 신설 2개 군(무주·구례), 재난(산불) 대응 2개 군(의성·산청)으로 구분됨.

3) ★는 2026년 2차 공모(2026. 6. 11. 발표) 선정 군임. 관측 중점인 2026년 6월의 인구 증가가 자체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2차 선정 발표에 따른 것이므로 유형별 평균 산정에서 제외하고, 표에는 전수조사 결과로써 행을 유지함.

4) 지수의 정의는 본문 참조. 발표 직후 초기 급증이 평소 월 변동의 2배(표준편차의 2배)를 확실히 넘어 통계적으로 실재하는 군에만 기재함(괴산·영동). '·'는 두 경우임 ① 발표 이후 인구가 늘지 않은(감소·정체) 군, ② 초기 변동이 평소 잡음 수준이어서 지수가 불안정한 군. 두 경우 모두 '초기 유입 급증'이라는 지표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는 수급 기준일이 신규 전입을 차단한 설계의 직접 결과임.

자료: 각 군청 공고·조례 및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주민등록 인구통계(시군구·월별), 검색일: 2026. 7. 17.

I 자료·방법 주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시군구 월별, 2025. 1.~2026. 6.),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입신고 원자료(전국 시군구 간 이동, 2025. 10.~2026. 6. 누적 3개 구간),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MDIS, 2023. 1.~2025. 12.),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자체 현금성 지원 전수 웹 조사(군청 공고·조례·지역언론 원문 확인)에 근거함.
- 인구 지수·인구 변화는 월별로 공표되는 주민등록인구(잔량)에서 산출하므로 2026년 6월까지 월 단위로 제시됨. 반면 전입·전출 흐름은 자료의 시간 해상도가 달라, 2025년 12월까지의 월별(MDIS), 2026년 상반기는 누적 3개 구간(2025. 10.~11. / 2025. 12.~2026. 5. / 2026. 6.)으로만 관측됨. 따라서 2026년 흐름은 월별 배율이 아니라 구간 월평균으로 비교함.
- 전입자 수는 시군구 간 이동만 집계하고 관내 이동은 제외함. 괴산군 관련 전입자 수치는 전 연령 기준이며(20세 이상 기준 2025년 12월 2,492명, 평시의 12.5배), 연령·출신지 분해는 20세 이상 기준임. 초과 유입은 급증 구간 실제 유입에서 사전 기준선(2025. 1.~9., 월평균)을 차감한 값임.
- 본 고의 인구 변화는 통제변수·고정효과를 두지 않은 원계수 기술통계이며 인과 추정이 아님. 순변동에는 출생·사망 등 자연 증감이 포함되고 군 간 연령 구조 차이는 통제하지 않았으며, 2025년 12월은 통제군에서도 유입이 평시의 1.26배였음. 자기선택을 통제한 처치효과 추정은 별도 연구에서 수행 중임. 2025년 상반기 지급 종료 5개 군(해남·고흥·완도·진도·영광)과 광역자치단체 단위 정책은 분석에서 제외함.

감 수 유찬희 연구위원 061-820-2022 chrhew@krei.re.kr

내용문의 심재현 연구위원 061-820-2196 jhsim@krei.re.kr

※ 「KREI 이슈+」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이슈+

제57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인구 추세 변화와 의의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행 2026. 8.
 발행인 한두봉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세일포커스(주)
 I S S N 2983-3418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